

가족 내 범죄, 돌아보기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지난 3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로 살다가 지난해 12월 남편에 의해 끝내 살해당한 아내의 사건은 우리 사회 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딸이 언론사를 통해 자신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비극적인 가정사가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보자는 첫 가정폭력의 기억을 1997년도 당시 알코올 중독인 부친으로부터 모친은 매일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삼남매도 아동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그 후 부친의 폭행 정도가 심해짐을 인지한 모친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2008년 신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이를 가족 내의 사적인 일로 간주하고 폭력남편을 대상으로 어떠한 제지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였다. 2015년에는 술 취한

부친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받은 제보자의 모친이 2차 신고를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불처분’을 받아 부친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다. 이후 2017년 11월 모친은 가정폭력 사건으로는 마지막 3차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부친은 제보자의 모친과 여동생의 목을 졸라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상답소 위탁 처분’으로 이 사건 역시 다시 종결되고 만다. 그 후 2018년 12월 제보자의 모친은 결국 부친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었는데, 아내를 살해한 제보자의 부친은 지난 4월 재판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이 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 달 후 제보자의 부친은 양형부당을 호소하며 억울하다고 항소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심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초에도 비슷한 배우자 살인사건이 있었다.

* 범죄심리학자로서 여성 대상 범죄 관련 형사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재소자 분류심사를 위한 교정심리검사 소년범죄자 성격평가도구인 특수인성검사 성범죄자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KSORAS 등을 개발하였다.

2019년 3월 23일, 군산의 한 논두렁에서 63세 여성의 시신이 이불 및 베개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52세였던 A씨였는데, 이 사건 역시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함으로써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피의자는 아내 살해 이외에도 2010년 3월 이후 8년 동안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이유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20대였으며,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하고 이후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8년을 버텼다. 그러다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여섯 명에 이른 연쇄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불과 8년뿐이었다. 그는 작년도에 출소를 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감독 하에 있었으나 출소 후 혼인 신고한 여성을 또다시 폭행하여 살해하기에 이른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경찰은 따라서 최초 죄명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하였다. 허나 피의자 전처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남긴 호소문으로 인해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이른다. 내용인즉슨 피의자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번 자신에게 의사 표명을 하였기에 치사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장이었다. 피의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탓에 당황하여 몇 대 찼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걷다가 혼자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주장하였다. 부검 결과 정맥이 검출되어 성폭행도 한 때는 의심이 되었으나, 피의자는 부부간의 화해를 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우발적인 인명피해라고 강력하게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딸은 자신의 부친이 이 사건 이전

에도 여러 번 자신에게 현재 처에 대한 적대적인 살의를 피력한 적이 있다고 제보하였으며, 더욱이 피의자에게는 4명의 전부인이 존재하였고 그들 모두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음을 고발하였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사망한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의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를 꽤심히 여긴 남편에 의해 피해 여성은 끔찍한 폭행과 성폭행 후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뒤늦게 경찰은 CCTV 등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때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피해자의 자매가 함께 끔찍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인에게 금전 등의 유인책을 써서 피해자를 대신 죽여줄 수 있느냐는 청부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주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염탐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따위를 살해 전날까지도 염탐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피의자의 죄명은 최초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는 유치장 안에서 경찰에게 손톱깎이를 빌려 삼키기까지 하였다. 살인죄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던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방향에 불만을 품고 양값음을 시도했던 정황이다.

이 같은 사례들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 내 폭력으로 신고를 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이다. 이는 꼭 경찰만의 단일한 수사방식 때문만은 아닌 것이,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기소가 쉽지 않

으며 법원 역시 접근금지처분 등의 의사결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아내를 장기간동안 폭행하여 살해했음에도 어찌하여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문이다. 위 두 사례에서처럼 살인죄보다는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며, 성폭행이 분명한데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도 하며, ‘칼로 물베기’인 부부싸움은 상습제도로 쉽게 화해와 조정이 될 것으로 짐작한다. 이혼소송을 겨우겨우 제기하여도 신변안전은 보장되지 않으며 아이는 물론 친정식구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이 반복된다. 이글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실태와 처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어디서부터 이런 부조리가 시작되는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탐색해보려 한다.

친족범죄 사건의 발생실태

〈표 1〉에는 일단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파·가해자 관계에 따른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통계는 2017년도 대검찰청 통계분석에서 확인된 흉악범죄와 강력범죄에의 사건 수로서 친족 간에 벌

어지는 잔혹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살인사건(미수사건 포함)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인 경우를 포함 친족인 경우가 31.8%를 차지하며, 폭행에서는 11.1%, 상해의 경우 12% 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5.6%를 차지한다. 살인사건의 삼분의 일이 동거친족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은 서구 사회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로서, 한국 가족문화의 특이성을 반영해준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도에 동거친족에 의해 발생한 살인사건 180건 중 살인 기수사건은 총 102건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치에는 이 중 부부 간에 일어난 배우자 살인의 건수는 확인할 길이 없다.

〈표 2〉에서는 친족(기타 친족 포함)간 살인(미수 포함), 친족 성폭력, 친족 폭력/상해사건 통계치는 다시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해보았다. 2008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 친족 사이 벌어진 성폭력, 폭력 및 상해사건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의 경우 특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친족 간 성폭력범죄의 경우 지난 십여 년 간 심각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친족폭력 및 상해사건 역시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과거에는

〈표 1〉 2017년도 강력범죄 통계(대검찰청 범죄분석)

			합계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소계			1,861,796	15,023	32,783	8,241
형법범	강력범죄 (흉악)	소계	962,775	14,587	29,618	7,679
		소계	36,583	1,257	895	339
		살인(미수 포함)	986	86	180	48
		성폭력	32,837	1,071	539	245
	강력범죄 (폭력)	소계	332,779	8,701	25,667	4,632
		폭행	228,999	4,640	18,389	2,474
		상해	74,115	2,597	4,871	1,492

〈표 2〉 경찰청과 검찰청 통계의 친족범죄 인원 비교(팔호 안 살인기수)

(단위: 건)

	친족 살인		친족 성폭력		친족 폭력/상해	
	경찰청	검찰청	경찰청	검찰청	경찰청	검찰청
2008	228	187	44	286	19,945	18,154
2009	261	223	49	315	18,241	16,720
2010	280	229	461	386	14,285	13,037
2011	257(110)	246	389	367	13,578	12,168
2012	259(117)	263	520	524	15,712	14,708
2013	212(89)	215	601	598	17,680	16,470
2014	236(105)	239	612	631	18,127	16,672
2015	250(102)	250	655	688	32,589	30,084
2016	210(101)	210	676	730	36,676	33,444
2017	227(102)	228	721	784	32,978	30,299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1990~2010/2011~2017

〈표 3〉 영아살인과 존속살인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아살해	12	12	18	12	16	6	11	13	8	8
존속살해	44	58	66	48	32	28	36	24	32	25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1990~2010/2011~2017

암수범죄화 되어 형사사건으로는 처리되지 않던 가족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들이 점점 더 많이 사건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에는 영아살인과 존속살인의 사건 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친족범죄 통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으로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 상 가족 간 범죄로는 충분히 간주할 수 있을 것이기에 통계치를 제시하여 보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영아살인은 십년 전 정도보다는 줄어들어 8건이 보고되었고 존속살인의 경우에도 전보다는 줄어들어 25건이 제시되었다. 이는 가

족의 해체,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와 같이 가족의 해체라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결과론적인 통계적 추세라고 판단된다.

친족범죄 사건의 처리현황

애초 이 글은 여러 가지 사법절차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도모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살인사건의 통계치를 놓고 보자면 친족살인은 여러 가지 절차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통계치 상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가족 간 범죄에 있어 상담제도 등 사법절차가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왜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점에는 타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표 1>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친족성폭력과 폭력 및 상해사건은 급속히 증가하는 데에 비하여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는 여전히 보호처분 위주로 유지하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은지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앞서 제시하였던 두 사례에서도 지적되었던 다시피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표 4>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건수와 검거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신고건수에 비하여 7.7%에서 17.9%에 이르러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사건은 거의 사건화가 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최근 3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두 가정폭력사건 중 절반 이하만이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예 처리가

<표 4> 경찰 단계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
(경찰청 범죄백서, 2018)

년도	신고건수 (A)	검거건수 (B)	신고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B/A)
2011	-	6,848	-
2012	-	8,762	-
2013	160,272	16,785	10.5
2014	227,608	17,557	7.7
2015	227,630	40,828	17.9
2016	264,567	45,619	17.2
2017	279,082	38,583	13.8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약 십분의 일 정도가 검거되고 그 중 또 1/2 정도의 사건만이 송치되는 것이다.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8.5%에 그쳤고, 불기소 처분 비율은 49.9%에 이르렀으며 그 중 가정보호사건 송치 비율이 40%에 육박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2010년과도 유사하였다(표 6). 불기소처분 중 유의미한 것은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의 각 비율인데, ‘기소유예’는 가정폭

<표 5> 가정폭력범죄 검거, 조치현황 (경찰청 범죄백서, 2018)

년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가정보호사건 송치
		계	구속	불구속	
2010	7,359건	7,992명	60명	7,719명	450명
2011	6,848건	7,272명	51명	6,925명	341명
2012	8,762건	9,345명	73명	17,738명	494명
2013	16,785건	18,000명	262명	18,416명	1,579명
2014	17,557건	18,666명	250명	18,416명	2,819명
2015	40,822건	47,549명	606명	46,943명	15,710명
2016	45,614건	53,476명	509명	52,967명	19,828명
2017	38,489건	45,206명	384명	44,822명	15,965명

〈표 6〉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분 결과

	접수	구속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송치	기타	
			처분계	기소계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	5,185	32	5,240	577	112	465	113	918	8	1,654	22	1,908	40
비율		0.6		11.0	2.1	8.9	2.2	17.5	0.2	31.6	0.4	36.4	0.8
2015	47,007	662	46,545	3,970	1,748	2,222	1,245	4,802	63	17,316	11	18,207	931
비율		1.4		8.5	3.8	4.8	2.7	10.3	0.1	37.2	0.0	39.1	2.0

(전소영 등, 2017)

력처벌법 제9조 2에서 정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인해, ‘공소권 없음’의 경우,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고소 없음, 처벌 불원으로 인해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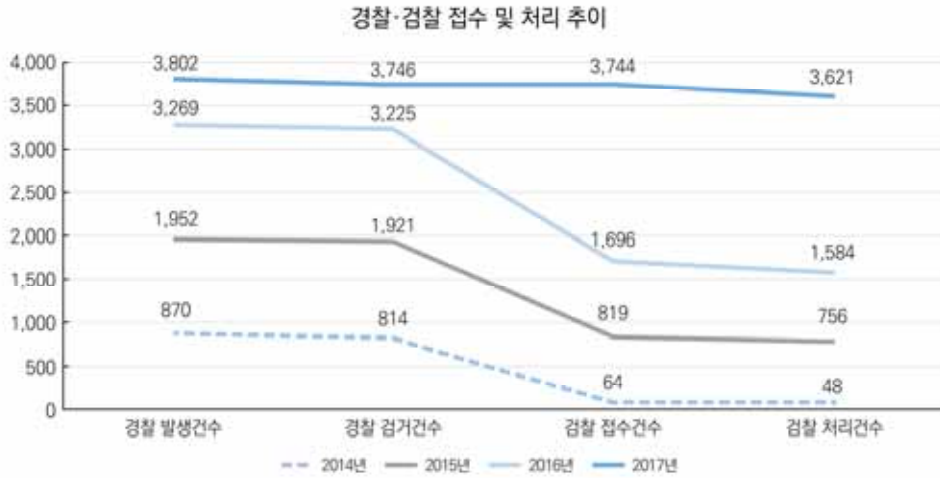
법원 역시 가정폭력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인상적인 것은 42.7%의 사건들에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되는 경우에도 8호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4,431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 받은 사람은 3,202명(15.5%)으로 대부분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2호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명(0.0%)이고, 1호 접근행위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45명(0.2%)에 해당하였다(사법연감, 2018).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위탁을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다는 가정의 유지와 관계 개선을 우선하여 그 결정을 하는 것으로

〈표 7〉 법원의 2016년도 가정보호사건 처분 결과

합계	계	보호처분													불 처 분	타법원 이송	기타
		단순처분								병과처분							
		1호 접근 행위 제한	2호 접근 행위 제한 (전기 통신 이용)	3호 친권 행사 제한	4호 사회 봉사 · 수강 명령	5호 보호 관찰	6호 감호 위탁	7호 치료 위탁	8호 상담 위탁	1·5호	4·5호	5·8호	기타				
가정 보호 사건	20,622	11,562	45	1	-	3,202	1,504	-	78	4,431	44	1,273	478	506	8,802	173	85
구성비 (%)	(100.0)	(56.1)	(0.2)	(0.0)	(-)	(15.5)	(7.3)	(-)	(0.4)	(21.5)	(0.2)	(6.2)	(2.3)	(2.5)	(42.7)	(0.8)	(0.4)

(사법연감, 2018)



[그림 1] 경찰과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접수 및 처리의 추이(검찰연감)



[그림 2]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처분 결과(검찰연감)

보인다. 즉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처분의 우선적인 배려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족 간 범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1]은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2014년도 비하여 2017

년도에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를 더 많이 사건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를 참조하면 사건화는 전에 비하여 많이 되는 데에 비하여 대다수의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기소율의 경우 2014년 29.1%, 2015년 34.6%, 2016년

〈표 8〉 보건복지부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비고
2001	2,606	(63.1)	-		1,527	(36.9)	4,133	(100.0)	
2002	2,946	(71.7)	-		1,165	(28.3)	4,111	(100.0)	
2003	3,536	(71.0)	-		1,447	(29.0)	4,983	(100.0)	
2004	4,880	(69.7)	-		2,118	(30.3)	6,998	(100.0)	
2005	5,761	(72.0)	-		2,239	(28.0)	8,000	(100.0)	
2006	6,452	(72.5)	-		2,451	(27.5)	8,903	(100.0)	
2007	7,083	(74.7)	-		2,395	(25.3)	9,478	(100.0)	
2008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0)	
2009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2010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2011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2012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0)	
2013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2014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5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2016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0)	
2017	30,923	(90.5)	292	(0.9)	2,951	(8.6)	34,166	(100.0)	

32.7%, 2017년 18.8%로 기소율이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전체 건수의 약 47%인 1,708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큰 의문점은 〈표 8〉에 제시된 보건복지부 통계이다. 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총 사건 수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고된 범죄사건화 된 수치와는 현저히 다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서 신고된 건수는 2017년 경찰서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이첩되었던 3802건보다도 거의 열배나 많다. 물론 이 중에는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 범죄사건화 하기에는 요건 충족이 안되는 사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 10%의 사건만이 경찰로 이첩된다는 현실과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아동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은 현장에서의 사건 처리 방식을 다시 한 번 재검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가족범죄를 주제로 실태와 처리현황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상대로 가정보호주의가 모든 형사사법단계의 곳곳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사건화가 되지 않으며 송치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구속시키지 않으며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이렇게 발생하는 사건의 약 10% 내의 사건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는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여 가정범죄 사건을 자동적으로 형사사건화 하고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만 하더라도 형사사건화 하고 친권박탈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아동학대사건으로 신고되는 초기부터 법원이 중심이 된 개입을 하여 재발위험성을 근거로 수많은 조건부 처분을 하면서 위험을 관리한다. 영미법국가의 가족범죄 전담재판부(예, <http://www.lacourt.org/division/familylaw/familylaw.aspx>) 등에서는 결코 일회성 처분으로 가족범죄를 다루지 않는다. 이는 곧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삼는다는 것으

로서, 보호사건만을 다루는 재판부를 따로 두기보다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특정 사건에 대하여 동일 선상에 놓고 다룰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사건이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법률서비스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법무행정, 즉 형법이나 특별법이나의 갈래가 처분의 중심이 된다. 그러다보니 사건에 대한 관리의 지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가족범죄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가정 내 폭력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가족범죄가 꼭 그것만이 아닐 것인데, 다양한 문제를 다 포섭하지 못하였던 것은 순전히 필자의 부족함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연구물들에서는 가족이 함께 가담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1994~2010).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2011~2017).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2006~2017).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전국)(1990~2010).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전국)(2011~2017).
 경찰청, 「경찰청범죄백서」, 2018.
 대법원, 「사법연감」, 2018.
 검찰청, 「검찰연감」, 2018.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7.
 전소영, 이수정(2017). 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245-276.